

## 11. 해외 주요국의 딥페이크 관련 규제 및 처분 사례 분석

### [ 목 차 ]

1. 개요
2. 미국의 딥페이크 규제 동향
  - 가. 연방의 규제 동향
  - 나. 개별 주의 규제 동향
  - 다. 사례분석
3. 유럽의 딥페이크 규제 동향
  - 가. EU의 규제 동향
  - 나. 개별 국가 동향
  - 다. 사례분석
4. 중국의 딥페이크 규제 동향
  - 가. 규제 동향
  - 나. 사례분석
5. 시사점

### 1. 개요

- ▶ 딥페이크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이를 악용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딥페이크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 ▶ 본 보고서는 미국, 유럽, 중국의 딥페이크 규제 동향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각국의 접근 방식과 규제 현황을 비교 검토
- ▶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 음성,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을 말함. 이 기술은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긍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허위정보 유포, 명예훼손, 사기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악

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 ▶ 각국 정부와 입법기관은 딥페이크의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와 표현의 자유 보장 등 복잡한 이슈들로 인해 효과적인 규제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 미국의 딥페이크 규제 동향

### 가. 연방의 규제 동향

#### 1) No Artificial Intelligence Fake Replicas And Unauthorized Duplications Act of 2024 (이하 'No AI FRAUD Act')

##### ▶ 법안의 기본 개요

- '23. 4. Drake와 The Weeknd의 목소리를 모방한 "Heart on My Sleeve" 사건과 '23. 10. Tom Hanks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치과 광고 사건의 계기로 발의됨<sup>1)</sup>
- '24. 1. 10.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개인의 음성과 외모를 AI 기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sup>2)</sup>

##### ▶ 주요 내용<sup>3)</sup>

- 재산권 설정
  - 개인의 음성과 외모에 대한 연방 차원의 재산권을 설정
  - 개인이 자신의 식별 가능한 특징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부여

1) <https://www.thomsonreuters.com/en-us/posts/government/deepfakes-federal-state-regulation/>

2) <https://www.jdsupra.com/legalnews/u-s-house-proposes-no-ai-fraud-act-to-3223759/>

3)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6943/text>

- 금지 행위
  - 동의 없는 개인화된 복제 서비스의 배포 및 전송
  - 디지털 음성 복제본이나 디지털 묘사의 무단 공개 및 배포
  - 위 행위들에 대한 물질적 기여나 조력 행위
- 처벌 및 구제
  - 개인화된 복제 서비스 무단 배포의 경우 위반당 5만 달러(약 7천만 원) 또는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
  - 디지털 음성·이미지 무단 배포의 경우 위반당 5천 달러(약 7백만 원) 또는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
  - 징벌적 손해배상과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
- 당연 위법 조항(Per Se Harm)
  - ▲아동 성적 학대 자료를 포함하는 경우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은밀한(intimate) 이미지를 포함하는 경우의 디지털 묘사나 디지털 음성 복제는 그 자체로 법적 해악으로 간주됨
  - 이러한 경우는 별도의 해악 입증이 필요 없으며, Section (c)(4)의 형평성 형량(Balance of Equities)<sup>4)</sup> 적용에서 제외되며, 자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됨
- 제척기간
  - 권리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인지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4년 이내에 소가 제기되어야 함

---

4) (4) BALANCE OF EQUITIES.—Except when paragraph (3) applies, alleged harms shall be weighed against—(A) whether the individual whose voice or likeness is at issue is necessary for and relevant to the primary expressive purpose of the work in which the use appears;  
 (B) whether the use is transformative; and  
 (C) whether the use constitutes constitutionally protected commentary on a matter of public concern.

## 2) Defending Each and Every Person from False Appearances by Keeping Exploitation Subject to Accountability Act(이하 'DEEPFAKES Accountability Act')

### ▶ 법안 개요

-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을 방지하고, 악의적 딥페이크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하며, 딥페이크 콘텐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됨
- 2019년에 최초발의 된 후, 2023년 9월 21일 Yvette D. Clarke 하원의원과 Glenn Ivey 하원의원이 재발의 한 법안임<sup>5)</sup>

### ▶ 주요 내용<sup>6)</sup>

- 규제 대상
  - 첨단기술 허위인격 기록물(Advanced technological false personation record)<sup>7)</sup>을 대상으로 함
  - 악의적 목적의 딥페이크 제작 및 배포와 허위 정보 전파 목적의 딥페이크 사용, 주(州)간(interstate) 또는 외국(foreign)과의 통상(commerce)을 위한 모든 수단이나 시설을 사용하여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 핵심 규정
  -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자는 제작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디지털 워터마크를 반드시 포함해야하며, 콘텐츠가 AI로 생성되었음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
  - 기술적 조치와 관련해서 ▲시청각 콘텐츠의 경우 음성 안내와 화면 하단의 명확한 문구로 표시해야 하고, ▲콘텐츠 출처 확인이 가능한 기술적 요소(content provenance technologies)를 포함해야 하며, ▲링크나 아이콘 등을 통해 AI 생성 여부를 확인

5) <https://clarke.house.gov/clarke-leads-legislation-to-regulate-deepfakes/>

6)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5586/text>

7) 실존 인물의 발언/행위를 조작한 디지털 콘텐츠, AI 등 기술적 수단으로 제작된 영상, 음성, 이미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실제처럼 묘사하는 콘텐츠를 말함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함

• 처벌 규정

-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병과가 가능함  
민사 제재금(Civil Penalty)의 부과 가능한데, 기본 제재금은 건당 15만 달러(약 2억 원)이고, 가중 처벌 가능 사유를 명시할 수 있음
- 민사상 손해배상(Civil Damages)의 경우, 실제 손해액 및 위법한 딥페이크를 통해 얻은 이익과 기본적 피해에 대해서는 건당 5만 달러(약 7천만 원), 극단적이거나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건당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 위법한 딥페이크 콘텐츠에 성적 행위를 하거나 알몸 상태에 있는 형태로서 모욕을 주거나 괴롭히려는 노골적인 성적 내용이 포함된 경우 15만 달러(약 2억 원)가 청구되며 이 중 더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 예외 조항

- ▲실제 인물의 이미지나 음성 녹음이 주를 이루며 디지털 방식의 실질적 변형(substantially digitally modified)이 없는 경우 ▲본 법 제정 이전에 제작된 원본 콘텐츠의 영화, TV, 음악 또는 유사한 제작물을 편집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2차 저작물(derivative production)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작과 관련된 경우 ▲패러디 쇼, 역사적 재연, 허구적 라디오·TV·영화 프로그래밍과 같이 사람이 해당 허위 재현을 실제 활동으로 오인하지 않을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 ▲공공 안전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 공무원이 제작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법무부 장관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합법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요건 면제(waiver)를 허가할 수 있음

▶ 특별 조항<sup>8)</sup>

- 피해자 지원 체계(Deepfakes victim assistance)
  - 각 연방 검찰청에 전담 책임관(coordinator)을 지정하여, 외국 정부 관련 딥페이크 신고 접수 및 은밀하고 성적인 허위 딥페이크 콘텐츠의 신고 접수를 받도록 하고, 기소를 조율(coordinate prosecutions)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법무부 장관의 의무
  - 법무부 장관은 5년마다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기소 및 민사처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해당 보고서는 관련 동향 분석을 포함하도록 하며, 연방기관과 협력하여 작성하도록 함

### 3) Disrupt and End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Nonconsensual Exploitation Act of 2024(이하 'DEFIANCE Act')

## ▶ 법안 개요

- '24. 1. 30.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동의 없이 제작된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와 영상의 확산을 막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연방법임<sup>9)</sup>
- '24. 3. 6. Alexandria Ocasio-Cortez 하원의원이 하원에 동반 법안(H.R.7569)을 발의하였고<sup>10)</sup>, 2024년 7월 23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24. 7. 24. 하원에 접수되어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임<sup>11)</sup>
- 이 법안은 전체 딥페이크 영상의 96%가 동의 없는 포르노그래피라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sup>12)</sup>

8)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5586/text>

9) <https://www.judiciary.senate.gov/press/releases/durbin-graham-klobuchar-hawley-introduce-defiance-act-to-hold-accountable-those-responsible-for-the-proliferation-of-nonconsensual-sexually-explicit-deepfake-images-and-videos>

10) <https://www.billtrack50.com/billdetail/1720070>

11) <https://www.theindianlawyer.com/articles/web-exclusive-federal-defiance-act-passes-through-senate-awaits-house-approval>

12) <https://www.theindianlawyer.com/articles/web-exclusive-federal-defiance-act-passes-through-senate-awaits-house-approval>

▶ 주요 내용<sup>13)</sup>

## • 법적 구제수단

- 피해자들에게 연방 민사소송 제기권을 부여
- 고도 기술적 허위 인격 기록(advanced technological false personation record)의 한 형태인 디지털 위조(digital forgery)를 “소프트웨어,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생성된 식별 가능한 개인의 은밀한 시각물(intimate visual depiction of an identifiable individual)” 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음

## • 처벌 및 배상

- 법정 손해배상과 일반 손해배상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음
- 법정 손해배상액은 ▲기본 손해배상액의 경우 건당 15만 달러(약 2억 원) ▲가중 손해배상액의 경우 건당 25만 달러(약 3억 5천만 원)임
- 가중 손해배상의 사유는 아래와 같음
  - ▲피고가 해당 개인에 대한 성폭행, 스토킹, 괴롭힘을 실제 저지르거나 시도한 경우(committed in relation to actual or attempted sexual assault, stalking, or harassment)
  - ▲피고의 행위가 타인에 의한 성폭행, 스토킹, 괴롭힘이 실제 발생하거나 시도된 경우(the direct and proximate cause of actual or attempted sexual assault, stalking, or harassment)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 일반 손해배상의 경우 가해자가 얻은 수익을 포함한 실제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음

## • 소멸시효

-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함
- 미성년자의 경우 18세가 된 날부터 해당 일자가 기산됨

---

13)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senate-bill/3696/text>

## 나. 개별 주의 규제 동향

### 1) 캘리포니아주 규제 동향

#### ▶ 개요

- 캘리포니아 주지사 Gavin Newsom은 2019년 10월 3일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 관련 딥페이크 콘텐츠 배포를 금지하는 법안(AB 730)에 서명하여 시행 중이었으나, 한시법으로서 '23. 1. 1. 까지만 효력이 있었음
- 캘리포니아 주지사 Gavin Newsom은 2024년 9월 17일 선거 관련 딥페이크를 규제하는 세 개의 법안(AB 2839, AB 2655, AB 2355)에 서명했으며, 이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딥페이크 규제로 평가받고 있음<sup>14)</sup>
- 그러나 이 중 즉시 시행된 AB 2839(선거 관련 허위 정보와 딥페이크 확산 방지법)는 연방지방법원 John A. Mendez 판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여 '24. 10. 2. 예비 금지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시행이 중단된 상태임<sup>15)</sup>
- 나머지 두 법안(AB 2655: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딥페이크 관리 의무화, AB 2355: AI로 생성한 정치 광고에 대한 표시 의무화)은 '25년 1. 1.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캘리포니아가 AI 기업들의 본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신뢰성 보호를 위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sup>16)</sup>

14) <https://www.nytimes.com/2024/09/17/technology/california-deepfakes-law-social-media-newsom.html>

15) <https://www.usnews.com/news/us/articles/2024-10-02/judge-blocks-new-california-law-cr>

16) <https://therecord.media/california-enacts-law-regulating-deepfakes-election-harris>



▶ AB 730(선거기간 딥페이크 규제법)<sup>17)</sup>

## • 주요 내용

-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 관련 딥페이크 콘텐츠 배포 금지
- 피해 후보자에게 법적 구제 수단 제공
- 풍자나 패러디 목적의 콘텐츠는 예외 인정

▶ AB 2655(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딥페이크 관리 의무화법)<sup>18)</sup>

## • 주요 내용

-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대상으로 하며, AB 2655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웹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으로써 직전 12개월 동안 캘리포니아 사용자가 최소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음
- 선거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콘텐츠 차단 및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콘텐츠 라벨링을 의무화하고 있음
-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캘리포니아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며, 차단이나 라벨링이 필요한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25. 1. 1. 부터 시행 예정임

---

17) <https://legiscan.com/CA/text/AB730/id/2696371>

18) <https://sjud.senate.ca.gov/system/files/2024-06/ab-2655-berman-sjud-analysis.pdf>

▶ AB 2839(선거 광고에서 기만적인 미디어 사용 규제법)<sup>19)</sup>

## • 주요 내용

- 선거 관련 허위 정보와 딥페이크 확산 방지와 선거의 신뢰성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  
기본적으로 선거 120일 전부터 적용하며, 선거 관리 공무원 관련 내용과 투표 기기  
등 선거 장비 관련 내용은 선거 후 60일까지 연장 적용
- 후보자가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묘사하여 평판이나 선거 전망을 해칠  
수 있는 내용, 선거 관리 공무원이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묘사하여 선  
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 선거 관련 공직자의 허위 묘사로 후보  
자의 평판을 해치거나 선거 결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 투표 기기·투표용지·  
투표소 등을 허위로 묘사하여 선거 결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제함
- 피해 당사자, 선거 참여 후보자나 위원회,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금지명령 신청권 및  
손해 배상청구권 부여
- 2024년 10월 2일 연방지방법원 John A. Mendez 판사가 AB 2839에 대해 예비 금지  
명령 발령

▶ AB 2355(AI로 생성한 정치 광고에 대한 표시 의무화법)<sup>20)</sup>

## • 주요 내용

- AI로 생성하거나 변경한 정치 광고에 대해 "Ad generated or substantially altered u  
sing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필수 문구 표시를 의무화 함
- "합리적인 사람"이 진본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원본과 비교할 때 근본적으로 다르게  
이해 할 수 있는 AI 콘텐츠를 규제함
- 광고의 형식과 공개 방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  
색상 편집, 이미지 자르기, 크기 조정 등 비실질적 변경이나 단순 디자인 조정은 적  
용을 제외함
- 공정정치실천위원회(FPPC)가 집행하고, 위반 시 준수 명령이나 행정·민사 구제 수단  
적용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19)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AB2839](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AB2839)20)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AB2355](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AB2355)

## 2) 텍사스주 규제 동향

### ▶ 개요

- 텍사스주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SB 751을 통해 미국 최초로 선거 관련 딥페이크를 규제하기 시작함
- 2023년 9월 1일부터는 SB 1361(성적 딥페이크 규제)과 HB 2700(아동 관련 딥페이크 규제)을 시행하여 규제 범위를 확대함
- 이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음

### ▶ SB 751(선거 공정성 보호를 위한 딥페이크 금지법)<sup>21)</sup>

- 주요 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후보자를 해하려는 의도로 딥페이크 비디오를 제작하고, 선거 30일 이내에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함
  - "딥페이크 비디오"를 "기만할 의도로 제작되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행동을 실제 인물이 수행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비디오"로 정의함
  - Class A 경범죄<sup>22)</sup>로 규정하여 처벌함

21) <https://capitol.texas.gov/tlodocs/86R/billtext/html/SB00751F.htm>

22) 미국 텍사스주에서 가장 높은 정도의 경범죄 항목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가장 중범죄보다 덜 심각하지만 여전히 법적 처벌이 클 수 있음. Class A 경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4,000달러(약 565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SB 1361(성적 딥페이크 영상의 불법 생산 및 배포 금지법)<sup>23)</sup>

## • 주요 내용

- 당사자의 유효한 동의 없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비디오를 제작하거나 전자적 수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함
- 규제 대상은 당사자의 은밀한 부위가 노출되거나 성적 행위에 연루된 것처럼 보이는 딥페이크 비디오임
- Class A 경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함
- 다른 법률과 중복으로 적용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소 가능함

▶ HB 2700(아동 대상 딥페이크 보호법)<sup>24)</sup>

## • 주요 내용

- 18세 미만 아동의 성적 딥페이크 관련 규제를 강화함
- AI 애플리케이션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생성·수정된 시각물도 규제 대상에 포함
- 실제 아동의 얼굴·외모·특징적 표시 등으로 식별 가능한 경우를 규제함
- 기존 형법 제43.26조, 제43.261조, 제43.262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 ▶ 모든 법안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텍사스주는 미국에서 포괄적인 딥페이크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23) <https://capitol.texas.gov/tlodocs/88R/billtext/html/SB01361F.htm>24) <https://capitol.texas.gov/tlodocs/88R/billtext/html/HB02700F.htm>

## 다. 사례 분석

### ▶ (미국) FCC, AI 딥페이크 음성을 활용한 선거 방해 로보콜에 대해 600만 달러(약 84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sup>(24.9)</sup>

- (사건 개요) 정치 컨설턴트 Steve Kramer가 2024년 1월 뉴햄프셔주 대선 예비 선거를 앞두고 AI 딥페이크 기술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모방한 자동전화(로보콜)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하여 투표를 하지 말라고 권유함
- (당사자의 행위)
  - Kramer는 AI 기술자에게 150달러(약 21만 원)를 지불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음성을 모방한 메시지 제작
  - 뉴햄프셔 민주당 전 의장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발신 번호로 사용
  - Voice Broadcasting사를 통해 약 9,581건의 자동전화를 발송
  - 메시지는 예비선거에서 투표하지 말고 11월 본선거까지 표를 아끼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 (주요 쟁점)
  - Truth in Caller ID Act 위반 여부
  - AI 음성 복제 기술을 이용한 선거 개입 행위의 적법성
  - 발신번호 위조(spoofing)를 통한 기망 행위
- (관련 법령)
  - Truth in Caller ID Act of 2009 (47 U.S.C. § 227(e))<sup>25)</sup>
  - FCC 규정 47 CFR § 64.1604<sup>26)</sup>
  - 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sup>27)</sup>

25) 사기, 위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오인을 유발하거나 부정확한 발신자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함

26)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오인을 유발하거나 부정확한 발신자 정보를 전송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27) '인공적인 음성이나 녹음된 음성'을 사용한 통화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포함하며, FCC는 2024년 2월 AI 생성 음성도 이에 포함된다고 확인함

- (FCC의 결정)

- Kramer의 행위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선거 방해였다고 판단
- 기본 과징금 1회당 1,000달러(약 141만 원)에 100% 가중 처벌을 적용
- 확인된 3,000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총 600만 달러(약 84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

- (시사점)

- AI 기술을 이용한 선거 개입에 대한 최초의 중요한 제재 사례로써 의미가 있음
- AI 음성 복제 기술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규제 필요성 확인하고, 통신 기술을 이용한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 의지를 표명하였음

▶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Assembly Bill 2839에 대한 예비 금지명령 발령('24.10)

- (사건 개요) Christopher Kohls(유튜버 Mr. Reagan)가 제기한 소송에서 John A. Mendez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캘리포니아주의 딥페이크 규제법(AB 2839)이 수정헌법 제1조<sup>28)</sup>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예비 금지명령을 발령함<sup>29)</sup>

- (법안 주요 내용)

- 선거 120일 전부터 60일 후까지 기만적인 딥페이크 콘텐츠 배포 금지
- 후보자의 평판이나 선거 전망을 해칠 수 있는 AI 생성 콘텐츠 규제
- 위반 시 손해배상 및 금지명령 청구 가능

28)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연방의회가 언론·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주 정부에도 적용되며, 정부의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됨

29) <https://ppl-ai-file-upload.s3.amazonaws.com/web/direct-files/23553917/e17a26b3-c531-4602-b67b-34e264df4163/haeoe-juyogugyi-dibpeikeu-gyuje-mic-ceobun-sarye-bunseog.pdf>

- (법원의 판단)<sup>30)</sup>

- 위헌성 판단
-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 정치적 풍자와 유머 표현을 부당하게 제한
- 민주적 토론을 저해할 우려

- (규제 수단의 적절성)

- 과도하게 광범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봄
- 대항 언론(counter speech)과 같은 덜 제한적인 대안 존재한다고 봄

- (시사점)

- 딥페이크 규제 법안 제정 시 딥페이크 규제와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 확인

▶ (미국) 뉴햄프셔주 대법원, 딥페이크를 이용한 괴롭힘을 실제 위협으로 인정한 판결('23.7)<sup>31)</sup>

- (사건 개요)

- 피고 N.B.가 컴퓨터로 생성된 딥페이크 이미지를 이용해 피해자 S.D.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건에서, 뉴햄프셔주 대법원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괴롭힘을 실제적 위협으로 인정

- (법원의 판단)

- 위협의 실재성
  - 딥페이크를 이용한 괴롭힘도 실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정
  - 온라인상의 괴롭힘과 실제 피해의 인과관계 인정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실질적 피해로 인정

30) <https://charltonsqumant.com/us-judge-finds-new-california-election-deepfake-law-unconstitutional-and-imposed-preliminary-injunction-against-assembly-bill-2839/>, <https://reason.com/volokh/2024/10/02/judge-blocks-california-law-restricting-materially-deceptive-election-related-deepfakes/>

31) <https://newhampshirebulletin.com/2023/07/17/deepfake-computer-images-can-constitute-harassment-nh-supreme-court-holds/>

- 보호명령의 필요성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명령의 정당성 인정
  - 온라인상의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 확인
- (시사점)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 제시하였음
  - 온라인상의 괴롭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 확인함
  -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임

### 3. 유럽의 딥페이크 규제 동향

#### 가. EU의 규제 동향

##### 1)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딥페이크 규제

###### ▶ 법안 개요

- 2024년 2월 17일부터 전면 시행<sup>32)</sup>
- 온라인 플랫폼의 딥페이크 콘텐츠 관리 의무를 규정함
- 특히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에 더 엄격한 의무 부과<sup>33)</sup>

32) <https://www.euractiv.com/section/artificial-intelligence/opinion/the-ai-act-vs-deepfakes-a-step-forward-but-is-it-enough/>

33)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4868290](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4868290)



## ▶ 주요 규제 내용

- 투명성 의무
  - 딥페이크 콘텐츠의 명확한 표시 및 라벨링을 의무화함
  - AI 생성 여부를 사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함
  - 콘텐츠 제작 방법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감시 및 위험 관리 의무
  - 딥페이크 콘텐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함
  - 위험 평가 및 경감 조치 실행하도록 함
  - 연간 위험 평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

2) 인공지능법(AI Act)의 딥페이크 규제<sup>34)</sup>

## ▶ 법안 개요

- AI 기술(기계학습과 딥러닝 포함)을 사용하여 조작되거나 합성된 오디오, 이미지 또는 비디오 콘텐츠로서, 진짜처럼 보이거나 진실처럼 보이며, 실제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은 것을 말하거나 행동한 것처럼 묘사하는 것으로 정의함
- EU 내에서 생성·유통·사용되는 AI 기술을 활용한 모든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 및 민간 영역을 모두 포함

## ▶ 주요 규제 내용

- 위험 등급 분류 체계와 관련하여 딥페이크는 기본적으로 제한된 위험(Limited Risk) 카테고리 분류되나, 악의적이거나 불법적 사용 시 고위험(High Risk)으로 분류되어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

---

34) Łabuz, M. "Regulating Deep Fakes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CIG, vol. 2, no. 1, 2023

- 투명성 의무와 관련하여 콘텐츠가 AI에 의해 생성 또는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적절하고 시기적절하며 명확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조작한 주체의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함
- 예외 규정 (Article 52(3a))
  - 법에 의해 허가된 경우, 표현의 자유와 예술 및 과학의 자유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창의적·풍자적·예술적 작품의 일부인 경우, 그리고 법 집행기관의 딥페이크 탐지 및 수사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됨
- 취약계층 보호 (Article 52(3b))
  - 장애인이나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보장된 정보 제공과 함께 적절한 개입 및 플래깅 절차<sup>35)</sup>를 포함한 추가적 보호조치가 제공되어야 함
- 제재 수단
  - DSA(Digital Services Act)와 연계하여 연간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EU AI Office의 감독하에 회원국별 이행 상황이 모니터링됨
- 악의적 딥페이크 대응 강화 및 불법 콘텐츠 규제 실효성 제고, 예외 조항의 명확화, 그리고 제재 체계의 구체화 등이 향후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나. 개별 국가 규제 동향

### 1) 프랑스

#### ▶ SREN Law 개요

- 디지털 공간 보안 및 규제에 관한 법률(Law on the Security and Regulation of Digital Space)
- '24. 5. 21. 부터 시행됨
- 디지털 공간의 안전성 강화 및 온라인 콘텐츠 규제를 목적으로 함

35) AI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가 취약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식별하는 절차로서, 예를 들어 콘텐츠가 아동에게 해로운 경우, 이를 신속히 기별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함

## ▶ 주요 규제 내용

- 딥페이크 관련 형사처벌 규정
  - 동의 없는 포르노그래피 딥페이크 제작 및 배포 금지
  - 위반 시 2년 징역형 및 6만 유로(약 8,800만 원) 벌금형
  - 온라인 플랫폼 유포 시 3년 징역형 및 75,000유로(약 1억 1,000만 원)로 가중처벌하도록 함
- 플랫폼 책임 강화
  -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의무화함
  - 사용자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함
  - 알고리즘 투명성 보장 의무를 규정함

## 2) 영국

▶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OSA)<sup>36)</sup>

- 영국의 OSA는 2023년 10월 26일 제정되어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포괄적인 온라인 안전 규제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특히 동의 없는 성적 딥페이크의 제작과 공유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하여 무제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했으며, 이를 추가로 유포할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음
- 동의 없는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또는 영상의 제작 및 공유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해당 이미지 또는 영상을 공유하거나 공유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까지 금지함
- 의도적 또는 부주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경우, 고의적인 고통 유발 의도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함
- 플랫폼의 콘텐츠 모니터링 의무 강화하고 있음

---

36) <https://www.withersworldwide.com/en-gb/insight/read/seeing-is-deceiving-manipulated-digital-content-deepfakes-and-the-law>

- 처벌 규정
  - 최대 2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무제한 벌금형이 가능함
  - 위반행위자는 성범죄자 등록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형사사법법안 개정안(2024년)<sup>37)</sup>

- 새로운 범죄 유형 신설
  -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 자체를 범죄화함
  - 공유 의도와 관계없이 제작만으로도 처벌 가능
  - 피해자의 동의 없는 모든 성적 딥페이크 제작을 금지함
- 처벌 체계
  -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 전과기록 및 무제한 벌금형 가능
  - 제작 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가능
  - 제작과 공유를 별도 범죄로 취급하여 가중처벌을 가능하도록 함

#### 다. 사례분석

▶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 딥페이크 포르노 제작유포 혐의자들 상대로 10만 유로(약 1억 4천만원) 손해배상 청구('24.7 예정)<sup>38)</sup>

- (사건 개요) 2020년 아버지(73세)와 아들(40세)이 멜로니 당시 이탈리아 형제당 대표의 얼굴을 포르노 배우의 신체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미국 포르노 사이트에 게시하여 수백만 회 조회수를 기록함

37) <https://www.bbc.com/news/uk-68823042>, <https://www.evidenceregistry.org.uk/government/criminalises-creation-of-deepfakes-but-with-a-major-loophole/>

38) <https://www.politico.eu/article/italian-pm-giorgia-meloni-called-to-testify-in-deepfake-porn-case/>

- **(당사자의 행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멜로니 총리의 얼굴을 합성한 포르노 영상을 제작하여 미국 소재 포르노 사이트에 해당 영상을 업로드
    - 수개월간 영상을 방치하여 수백만 회 이상의 조회수 발생함
  - **(법적 조치)**
    - 형사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 민사상 10만 유로(약 1억 4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 멜로니 총리는 2024년 10월 8일 사르디니아 사사리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로마에서 화상으로 증언에 참여하여 더 강력한 법적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함<sup>39)</sup>
  - **(시사점)**
    - 세계 정상급 지도자가 딥페이크 포르노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최초 사례임
    - AI 기술 오남용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 부각시킨 사례임
- ▶ **(스페인) 법원, AI 딥페이크 누드 이미지 제작·유포한 15명의 학생들에게 1년 보호관찰 선고('24.7)**
- **(사건 개요)** 스페인 남서부 알멘드랄레호 지역의 13~15세 학생들이 여학생들의 얼굴을 AI로 누드 사진에 합성하여 WhatsApp 그룹을 통해 유포한 사건<sup>40)</sup>
  - **(당사자의 행위)<sup>41)</sup>**
    - AI 도구를 사용해 여학생들의 SNS 프로필 사진을 누드 이미지에 합성
    - WhatsApp 그룹을 통해 조작된 이미지를 공유 및 유포함
    - 2023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유포함
    - 피해 여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불안에 시달려옴

39) <https://www.telegraph.co.uk/world-news/2024/10/08/italy-giorgia-meloni-court-deepfake-porn-videos/>

40) <https://www.newsbytesapp.com/news/world/spain-sentences-15-schoolchildren-over-ai-generated-naked-images/story>

41) <https://www.scottishlegal.com/articles/spain-court-punishes-schoolboys-for-spreading-ai-deepfakes-of-girls>

- (법원 판결)<sup>42)43)44)</sup>

- 가해학생들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 처분 및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과 책임감 있는 사용에 대한 교육 이수를 명령함
- 피해자들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 인정하고, 가해학생들의 지속적인 유포 행위의 악질성을 인정하였으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검토함
- 14세 미만 가해자는 미성년자로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아동보호서비스로 이관되어 교육을 받게 함

- (시사점)

- AI 기술 오남용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된 사건이었음
-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는 판결임
- 스페인 최초의 AI 딥페이크 기술 악용 관련 주요 판례로써의 의의가 있음

▶ (영국) 법원, Online Safety Act에 따른 최초의 사이버플래싱<sup>45)</sup> 유죄 판결 및 징역형 선고 ('24.3)

- (사건 개요) Nicholas Hawkes가 2024년 2월 9일 15세 소녀와 60대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동의 없이 WhatsApp과 iMessage를 통해 전송함

- (당사자 행위)

- 아버지의 전화기를 빌린다고 하고 다른 방에서 성기 사진을 전송
- 이미 성범죄자 등록부에 등재된 상태에서 추가 범행을 함

42) <https://www.scottishlegal.com/articles/spain-court-punishes-schoolboys-for-spreading-ai-deepfakes-of-girls>

43) <https://www.newsbytesapp.com/news/world/spain-sentences-15-schoolchildren-over-ai-generated-naked-images/story>

44) <https://www.theguardian.com/world/article/2024/jul/09/spain-sentences-15-school-children-over-ai-generated-naked-images>

45) 디지털 환경에서 불법적인 성적 콘텐츠, 특히 비공식적인 노출 사진이나 성적 언어를 포함한 메시지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의미함. 이는 전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임

### • (주요 쟁점)

- Online Safety Act 2023에 의해 신설된 Sexual Offences Act 2003의 Section 66A<sup>46)</sup> 위반 여부

### • (법원 판결)<sup>47)</sup>

- Southend 형사법원에서 총 66주 징역형 선고(사이버플래싱 혐의로 52주에 기존 법원 명령 위반으로 14주 추가됨)
- 10년간의 접근금지명령 및 15년간의 성범죄 예방 명령 부과

### • (시사점)

-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사이버플래싱 처벌 규정의 최초 적용 사례로써 의의가 있음
-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의지 표명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 집행 확인한 사례임
- 영국의 Online Safety Act 2023은 사이버플래싱과 함께 딥페이크 포르노그래피 제작 및 유포를 명시적으로 범죄화했으며, Hawkes 사건은 이 법률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질적 처벌 수단으로 작동함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딥페이크 포르노그래피 사건에도 유사한 수준의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함

46) 수신자에게 경악, 고통,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 또는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전송하며, 수신자의 경악, 고통, 수치심 유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행동한 경우로써 타인의 성기 사진 또는 영상을 의도적으로 전송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47) <https://www.telegraph.co.uk/news/2024/03/19/nicholas-hawkes-photos-first-convicted-cyber-flashing/>

## 4. 중국의 딥페이크 규제 동향

### 가. 규제 동향

#### 1)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 ▶ 개요

- 2023년 1월 10일부터 시행됨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公安部에서 제정함<sup>48)</sup>
  -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인터넷 콘텐츠의 관리 강화, 국가안보와 사회공공이익 수호, 국민·법인·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 보호,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증진을 목적으로 함<sup>49)</sup>
  - 데이터 경제 활성화보다 데이터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전 예방적 규제 체계 구축하고 있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 ▶ 주요 내용<sup>50)</sup>

- 적용범위(2조)
  - 딥페이크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대상으로 함.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개인을 포함하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하는 자도 포함
  - 중국 역내에서의 서비스 제공에 한정됨
  - 법률·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르도록 함
- 일부 규정 규율대상의 확대와 플랫폼의 책임 강화
  -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공자와 딥페이크 서비스 제공자는 실질적으로 특정 플랫폼(빅테크 기업 운영 플랫폼)인 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체계로 작동
  - 예외적으로 금지사항을 규정한 제6조는 규율대상을 딥페이크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

4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150355i>

49) [https://world.moleg.go.kr/web/dta/lgsITrendReadPage.do?AST\\_SEQ=55&CTS\\_SEQ=51515](https://world.moleg.go.kr/web/dta/lgsITrendReadPage.do?AST_SEQ=55&CTS_SEQ=51515)

50) 이상우, "중국의 딥페이크 규제와 데이터 안보", 홍익법학 제24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pp.135-162.



한 모든 조직과 개인(任何組織和個人)으로 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적인 콘텐츠의 생성·유포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제6조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국가안보 및 이익을 해치는 행위 ▲국가 이미지 훼손행위 ▲사회이익 침해행위 ▲경제 사회 질서 파괴행위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법률·행정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의 행위를 금지 허위 뉴스와 관련하여 ▲딥페이크 기술로 가짜뉴스를 생성·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부당국이 승인된 매체 외 다른 출처의 원본 사용을 금지함
- 그 외에도 딥페이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관리 프로세스 구축(제7조)', '관리규칙 및 플랫폼 운영규정 등의 공개(제8조)', '사용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인증(제9조)', '불법·불량 콘텐츠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제10조)', '가짜 뉴스 유포 방지 및 주무부처에 보고(제11조)', '사용자의 불만사항에 관한 적절한 대응조치(제12조)' 등의 의무를 부과
-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 딥러닝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 시 관련 규정 준수(제14조)
  - 생체 식별 정보(얼굴, 음성 등) 편집 시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필요(제14조)
  - 기술 관리 강화 및 프로세스 검증 의무(제15조)
  - 자체·외부기관 안전 평가 실시(제15조)
- 워터마크 삽입 의무
  - 혼동·오인 유발가능한 콘텐츠에 딥페이크 표식을 필수로 표기하도록 함(제17조)
  - 딥페이크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포·재생산되지 못하도록 원본 추적가능한 로그 기록 저장 의무 부과(제16조)
  - 워터마크 등 기술적 조치 삭제·변조 금지(제18조)

- 감독 및 처벌

- 딥페이크 기술도 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 기술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에는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여, 「알고리즘 규정(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상의 관련 규정<sup>51)</sup>을 따르도록 하였음(제19조)
- 딥페이크 기술이 포함된 제품·서비스 개발 시 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제20조)
-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각 기관은 딥페이크 서비스에 관한 검사와 감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제21조)
- 위반 시 치안관리처벌(治安管理处罚) 대상이 되고, 범죄를 구성하게 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刑事责任)을 지게 됨(제22조)

## 2)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 ▶ 개요

- 총 5장 24개 조항으로 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기술 발전과 거버넌스, 제3장 서비스 규범, 제4장 감독 검사와 법적 책임, 제5장 부칙
- 7개 부처 공동 제정(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 '23. 8. 15. 부터 시행

51) 구체적으로는 「알고리즘 규정」 제4장(제23조 내지 제30조)이 여기에 해당됨. 중국의 알고리즘 규정 제4장은 여론 형성 능력, 콘텐츠 유형, 사용자 규모, 데이터 중요도, 사용자 활동 개입 정도에 따라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공자를 등급별로 관리하는 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서비스 제공자는 네트워크 기록을 보존하고 당국의 보안 평가와 감독에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기술 및 데이터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규정 위반 시 경고부터 정보 업데이트 임시 중단, 1만~10만 위안의 벌금까지 다양한 처벌이 가능함

## ▶ 딥페이크 관련 주요 내용

- 표시 의무(제12조)
  - 「인터넷 정보 서비스 집합성 관리 규정」에 따라 이미지, 영상 등 생성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
  - 딥페이크 콘텐츠의 식별과 관리를 위한 직접적 규제 조항
- 개인 권리 보호(제4조)
  - 타인의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 프라이버시권 침해 금지
  - 개인정보 권익 보호
  - 딥페이크를 통한 무단 이미지 활용 및 조작 방지
- 서비스 제공자 의무(제7조, 제14조)
  - 합법적 출처의 데이터와 기초 모델 사용
  - 위법 콘텐츠 발견 시 즉각적인 생성 중단, 전송 중단, 삭제 조치
  - 사용자의 위법행위 발견 시 서비스 제한 또는 중단
- 안전성 평가(제17조)
  - 여론 형성이나 사회동원 능력이 있는 서비스는 안전 평가 의무화
  - 알고리즘 등록 및 변경 절차 준수

## 나. 사례분석

▶ (중국) 항저우 법원, 딥페이크 포르노 제작·유포 혐의로 징역 7년 3개월 선고('23.11)<sup>52)</sup>

- (사건 개요) 항저우 지역에서 딥페이크 AI 기술을 이용해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대량 제작하여 유포한 사건

---

52)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408290019>

- (당사자 행위)

- 1,200개 이상의 합성 영상 및 1,600개 이상의 합성 이미지 제작
- 연예인 및 일반인 다수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
- 제작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온라인상에서 유포

- (법원 판결)

- 징역 7년 3개월 선고
- 벌금 6만 위안(약 1,100만 원) 부과
- 민사상 손해배상 6만 위안(약 1,100만 원) 추가 부과

- (시사점)

- 중국 최초의 AI 얼굴 합성 관련 개인정보 침해 공익소송 사례
- 중국 당국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 표명한 사례로써 AI 기술 오남용에 대한 법적 제재 기준 제시
-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동시에 부과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 ▶ 중국에서는 아직 딥페이크 관련 주요 법적 사례가 공개되지 않았음. 다만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딥페이크 기술의 오남용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 및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됨

## 5. 시사점

### 가. 국가 간 비교 분석

- ▶ 규제 접근 방식의 차이

- 미국은 연방과 주 차원에서 다양한 법안을 통해 딥페이크 규제에 접근하고 있음. 특히 선거 관련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조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유럽은 EU 차원에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음. 개별 국가들도 이에 맞춰 자체적인 법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보안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음
-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을 우선시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음

#### ▶ 규제 범위의 차이

- 미국은 주로 선거 관련 딥페이크, 사기, 명예훼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AI 윤리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 중국은 국가안보, 사회 안정, 윤리적 가치 등을 포함한 폭넓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나. 딥페이크 규제의 쟁점 및 과제

#### ▶ 기술 발전 속도와 규제의 괴리

딥페이크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법과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술 중립적이고 유연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필요

#### ▶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딥페이크 규제가 예술적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 등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특히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딥페이크는 국경을 넘어 빠르게 퍼질 수 있어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임. 그러나 각국의 법체계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통일된 접근이 어려운 상황임

#### ▶ 기술적 대응과 법적 규제의 조화

딥페이크 탐지 기술 등 기술적 대응책과 법적 규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함.  
단순히 법적 규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기술 개발을 통한 대응도 병행되어야 함

▶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딥페이크 콘텐츠 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은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접근을 보여주고 있음

▶ 교육과 인식 제고의 중요성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식별 방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함

▶ 피해자 보호 및 구제 방안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특히 성적 딥페이크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과제임

## [ 참고 자료 ]

- "U.S. House Proposes No AI FRAUD Act to Combat Deepfake Media", JD Supra (2024)  
<https://www.jdsupra.com/legalnews/u-s-house-proposes-no-ai-fraud-act-to-3223759/>
- "Congress Bill: H.R.6943- No AI FRAUD Act of 2024"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6943/text>
- "Congress Bill: H.R.5586- DEEPFAKES Accountability Act of 2023"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5586/text>
- "Congress Bill: S.3696- DEFIANCE Act of 2024"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senate-bill/3696/text>
- "California enacts law regulating deepfakes, election", The Record (2024)  
<https://therecord.media/california-enacts-law-regulating-deepfakes-election-harris>
- "Senate Judiciary Committee Analysis: AB 2655", California Legislature  
<https://sjud.senate.ca.gov/system/files/2024-06/ab-2655-berman-sjud-analysis.pdf>
- "Assembly Bill No. 2839", California Legislature  
[https://leginfo.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AB2839](https://leginfo.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AB2839)
- Łabuz, M. "Regulating Deep Fakes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CIG, vol. 2, no. 1, 2023
- "The AI Act vs deepfakes: a step forward, but is it enough?", EURACTIV (2024)  
<https://www.euractiv.com/section/artificial-intelligence/opinion/the-ai-act-vs-deepfake-s-a-step-forward-but-is-it-enough/>
- "Italian PM Giorgia Meloni called to testify in deepfake porn case", Politico (2024)  
<https://www.politico.eu/article/italian-pm-giorgia-meloni-called-to-testify-in-deepfake-porn-case/>
- 이상우, "중국의 딥페이크 규제와 데이터 안보", 홍익법학 제24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pp.135-162.
- "Seeing is Deceiving: Manipulated Digital Content (Deepfakes) and the Law", Withers Worldwide  
<https://www.withersworldwide.com/en-gb/insight/read/seeing-is-deceiving-manipulated-digital-content-deepfakes-and-the-law>
- "Deepfakes victim assistance: New Hampshire Supreme Court holds", New Hampshire Bulletin (2023)  
<https://newhampshirebulletin.com/2023/07/17/deepfake-computer-images-can-consti>

tute-harassment-nh-supreme-court-holds/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In the Matter of Steve Kramer", Forfeiture Order, File No.: EB-TCD-24-00036094, FCC 24-104 (September 26, 2024)
- 中华人民共和国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等,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令第15号 (2023年7月13日)